

☑ 공식적 의견수렴절차 도입 ☞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실질적 반영

- 공개된 심사대상자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하여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
- 구체적인 의견제출 기한이나 방법 등은 별도 공고 예정
- 다만,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 등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추천위원회 심사 ☞ 대법원장은 이를 존중

- 추천위원회는 피천거인 중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
- 다만, 위원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하여 후보자 명단 외의 회의의 절차와 내용은 비공개
-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

■ 이로써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업무능력, 자질에 대한 검증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임

■ 대법원은 앞으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여 사회 정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임

1.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 개선방안 마련 경위

-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지명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서 재판관 지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규정한 외에 지명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 그러나 대법원장이 아무리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적격자를 물색, 검증하여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고려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음

2. 구체적 개선 내용

■ 추천위원회의 구성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나,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지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여성 1명 이상) ⇨ 법관인사 3인, 외부 법조인사 3인, 비법조인 3인
-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받아 임명
 - 각급 법원 대표자들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추천한 법관이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절차에 관여함으로써 사법부 내 절차적 민주주의 강화

■ 후보자의 천거

- 누구든지(개인, 법인 또는 단체)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음
- 헌법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

하여 피천거인 중 심사 부동의자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천거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

■ 피천거인의 제시

- 대법원장은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천거인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
-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은 없음
 -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1항에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한 것과 같은 취지

■ 공식적 의견수렴절차 도입

- 공개된 피천거인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추천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임 ☞ 헌법재판관 지명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음
- 의견제출 방식은 천거 방식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가능.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또는 익명의 제보,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추천위원회 심사의 존중

- 추천위원회는 피천거인 중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여, 대법원장에게 헌법상 주어진 지명권을 보장하면서도 자문기구의 실질적 심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다만, 위원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활성화하고 후보자의 인권 보장,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후보자 명단 외의 회의절차, 내용은 비공개로 함
-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추천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한편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대법원장은 그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적임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3. 앞으로의 전망

- 이번 내규의 제정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절차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각계의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통하여 헌법재판관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법원장도 절차 중에 수렴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이 내규는 2018. 9. 19. 퇴임 예정인 이진성, 김창중 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절차부터 적용될 것임